

제공일자	2016. 2. 5(금)	담당자	오승연 연구위원
홍보담당	변철성 수석(02-3775-9115)	연락처	02-3775-9036, 010-2362-7537 총 3매

제목 : 고령자의 자립생활, 주거와 의료수요를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주거정책 필요

□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의 오승연 연구위원은 『고령자 주거실태와 주거정책방향』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(고령화리뷰 2016년 제6호 테마진단).

□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주택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 주거공간의 중요성이 커짐.

○ 통계청의 2015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, 60세 이상 고령자의 75.1%가 향후에도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.

○ 고령자는 노후 주거환경의 중요한 조건으로 의료시설이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을 꼽는 것으로 나타남.

○ 나이가 들수록 신체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주택 내 사고위험이 커지는 특징이 있음.

*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접수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장소는 가정(61%)인 것으로 나타남.

□ 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, 독거노인일수록 현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낮고, 최저주거수준*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○ 고령가구는 아파트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음.

○ 80대 이상 가구의 최저주거수준 미달 비율이 17~20%로 추정되며, 이는 전체 가구 평균(10.7%) 보다 높은 수준임(<표 1> 참조).

* 국토교통부는 △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방수, △상수도, 입식부엌 등 필수 설비기준, △구조강도 확보, 채광·난방설비 구비 등 구조·성능 및 환경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을 정하고 있음.

<표 1> 전국의 연령대별 최저기준미달 가구 비율(2010년)

(단위: %)

구분	50~54세	55~59세	60~64세	65~69세	70~74세	75~79세	80~84세	85세 이상	전체
남	10.2	9.8	9.6	10.3	12.3	14.6	17	20.1	10.7
여	11.3	10.8	11.6	14.1	17.7	21.5	25.4	29.6	14.7

주: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, 원자료, 해당년도. 전체는 모든 연령대를 포함.
자료: 김용창, 최은영(2013) 추정 인용.

□ 선진국의 노인주거정책은 **Aging in place**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, 이는 고령자의 주거욕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, 시설입소보다 재택거주자를 증가시켜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.

- Aging in place는 연령, 소득, 능력수준에 관계없이 자신이 살던 집과 공동체에서 안전하고, 자립적이며 안락하게 사는 것을 말함.
- 고령자들이 최대한 늦은 나이까지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려면 신체기능저하를 보완할 수 있는 주택개량이 필요함.
- 또한 생활상의 안전, 안심,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나 돌봄서비스뿐 아니라 다양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함.
- 일본 정부는 개호보험법 개정(2011년)을 통해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대한 의료적 지원과 더불어 사전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조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**을 도입하였음.

** 지역포괄케어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, 의료 등 지역 내의 민간 사업자와 연계를 통해 지역 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약 30분 이내에 생활상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는 서비스나 대응을 24시간 365일 제공하는 체계 구축을 지향하고 있음.

□ 정부는 『주거약자지원법』에 근거해 노인주거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개량 지원이 부족하며 의료와 복지가 결합된 노인전용주택 공급이 미흡함.

-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전용 주거시설의 공급량*이 낮은 수준임.
- 고령자 전용주거시설은 주로 양로원 등 극빈층을 대상으로 한 무

료시설이 대부분이고 최근에 와서 고령자전용 임대주택 공급이 시작되었음.

- 2013년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개조비용으로 26억원의 용자를 공급하였으나 전액 LH공사에게 지원되었으며,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주거약자와 세대원, 임대사업 자에 대한 지원 건은 없었음.**
- 현재 고령자 주거시설은 요양시설이나 병원 아니면 일반주택이라는 두 가지 유형만이 존재하는데, 독립적 주거가 가능하면서 요양과 의료시설을 갖춘 복합적인 노인전용 주거시설이 필요함.

* 2014년 고령자전용 주거시설의 입소정원 수는 주거복지시설(20,110명)과 의료복지시설(151,200명) 합해서 171,310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고령자의 2.7%에 불과함.

**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김상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주거약자지원법 이행실태 점검 결과

□ 공급 위주의 고령자 주거정책에서 벗어나 고령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하는 정책이 요구됨.

- 고령자 주거정책은 ① 노인들이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지원 강화 ② 돌봄과 일상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, ③ 주거와 의료 수요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노인전용 주거시설 공급 확대, ④ 고령자의 건강상태, 가구유형, 경제적 수준에 따른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임.
- 고령자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노인전용 주택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임.

<첨부> 테마진단 “고령자 주거실태와 주거정책방향” 1부. 끝